

이재명, ‘군공항 이전 3대 원칙’... “국가가 직접 책임”

국가 지원·대통령 직접 갈등 조정
“충분한 보상·지원, 무안 불안 해소”
姜시장 등 적극 노력·건의에 ‘화답’
구체적 예산 확보·실행 계획 필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강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국가 지원 △대통령 직접 책임 하 갈등 조정 △무안군민 충분한 보상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 문제는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2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재정적 부담과 무안군의 반대로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하는 구조다. 하지만 약 1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광주시가 감당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 군공항처럼 국가가 직접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책임지겠다”며 “광주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 부지(광주공항)에 연구·교육 시설 등 광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틀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구 군공항은 국가 주도로 11~14조원이 투입, 민·군 공항 통합이 이뤄졌고 의성·군위 지역에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성공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가가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고, 이전 지역과 종전 부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시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방위원회서 심사 중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해왔다. 지난해 11월 강기정 광주시장은 한덕수 국

무총리를 직접 만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그 전달에는 민·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당시 강 시장은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이전 부지 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직접 소통해 준다면 분명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무안군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광주시 공직자 1000명을 투입, 경로당·전통시장 등을 돌며 3만여 명의 무안군민들을 직접 만나 소음 대책, 지역 맞춤형 지원책 등을 설명했다.

지역 경제계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보탰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도저히 광주 군공항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국가 주도로 전환해 예산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군공항 이전의 국가 주도 전환 및 무안군 제공항 서남권 관문공항화를 목표로 하는 ‘대선 공약 제안서’를 민주당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지난 2월 KBS광주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안군민의 58%가 군공항 이전에 반대했고 찬성은 38%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소음 피해(65%), 농수축산업 피해(12%), 안전 우려(11%) 등이 꼽혔다.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도 일관되게 ‘공모 방식 도입(유치 경쟁)’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무안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피해를 줄이고 동네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며 “충분한 보상과 합리적인 지원으로 무안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 대통령 직속 갈등 조정 기구를 설치해 광주·전남·무안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정성현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5·18 유가족 등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김양배 기자

‘함께, 오월을 쓰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어제 국립5·18민주묘지서 엄수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참석
‘소년이 온다’ 문재학 열사 소개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다.

18일 오전 10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다.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한 발길이 일찍부터 이어지며 행사장은 붐볐다.

이날 기념식에는 5·18 유공자 및 유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포함해 약 2500명이 참석했다. 무엇보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개혁신당이

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등 3명의 대선 주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는 △국민의례 △경과보고 △여는 공연 △기념사 △기념영상 △대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의 아픔을 되새기기 위한 경과보고를 비교적 앞서 진행했다.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남준, 김유민 학생이 유공자와 유족들 앞에 나서 5·18민주화운동의 현황을 낭독했다. 두 학생은 “질서를 유지하고 연대하며 성숙한 의식을 보여준 5·18민주화운동은 한동안 광주사태라고 불렸다”며 “우리 모두 함께 자랑스러운 5월 써내려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여는 공연에서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인물인 문재학 열사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기념사는 대통령 궐위에 이어 국무총리 자리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맡아 진행했다. 그는 기념사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시민의 공동체 정신은 ‘5월 정신’이 되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밑거름이 됐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역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시간에는 참석자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앞뒤로 흔들거나, 주먹을 높이 들며 하나 된 목소리로 오월의 노래를 불렀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81년부터 16년간 단체와 유족이 기념행사를 추진해오다, 97년 5월 9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국가보훈부가 주관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4·5·6면**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